

조총련 조직 연구*

정진성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논문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조직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일본에 정주(定住)하는 한국인의 구성에 관해 논의하면서 조총련계 재일한국인의 위치를 설정했다. 일제시기에 도일(渡日)한 재일한국인 중 조선적(朝鮮籍), 한국적, 일본적 한국인과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 일본에 가서 살기 시작한 한국인 집단, 조선적 재일조선인 중에서도 성격이 다른 몇 개의 집단 등, 여러 재일한국인(이 글에서는 북한계까지 포괄하여 재일한국인으로 통칭한다) 집단 중에서도, 특히 총련계 재일조선인이 형성·유지된 것이 강한 민족정체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기제로서 민족학교와 북한 본국과의 교류에 주목했다. 이와 같이 총련계 재일교포 집단이 해방 후 변화되어 온 과정을 일본사회의 변화, 한국과 북한 및 세 나라들 간의 관계 변화, 그리고 북한과 총련 및 남한과 민단·총련의 관계라는 다각적 사회변화를 통해 규명해보고자 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총련계 민족학교의 변화를 강조했다. 일본 문부성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따라 커리큘럼을 바꾸고, 교실에서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떼어내는 등 자기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편 민단체 학생들이 대거 총련계 민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체제와 남북한 대립구도를 반영하며 민단과 대립했던 조총련의 위상이 이러한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북한과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만 자기 위치를 규정했던 조총련이 개방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상황은 남북한의 연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주제어 : 조총련, 민단, 북한, 재일한국인, 남북관계, 민족학교

* 이 연구는 2001년 서울대학교 학제간협력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머리말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은 민단과 함께 일본에서 남북한관계 및 재일한국인의 상황을 표상하면서 조직과 가치지향을 변화시켜왔다. 일본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 4세에 이르는 사람들이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총련 조직을 통한 정치적 집단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제는 민족 정체성의 유지이고, 그것은 다시 민족학교와 북한과의 직접교류를 가장 중요한 통로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글의 가설이다. 이러한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해방 후 현재에 이르는 장기간의 조총련 조직의 전반적 변화과정을 추적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구체적인 민족 정체성의 형성이나 민족학교의 미세한 변화, 또는 북한과의 교류 양상 등은 그 하나하나가 깊이 있는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재일한국인 사회의 세대를 통한 변화, 남북관계, 북일관계 등의 변수와 함께, 전반적인 조총련조직과 지향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다루었다.

조총련에 관한 연구는 해방 직후 상황에 관한 역사적 연구, 민족학교에 관한 연구, 총련계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총련과 북한의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등, 적지 않은 축적이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남북한 통일의 관점에서 민단-총련 관계를 재고찰하는 시도도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변수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이러한 역사적, 사회과학적 연구들에 더해, 필자가 일본에서 2002~2003년에 걸쳐 조총련계 재일한국인에 대해 행한 면담조사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직접 관찰 및 수집한 다양한 일차자료를 참고로 했다. 조총련 조직 자체에 관해서는 동경의 본부 깊숙이 들여다볼 기회를 갖기는 힘들었으나, 본부 관련자 면담, 지부 및 분회, 총련이 경영하는 민족학교 방문 등을 통해 유추했다.

II. 재일한국인의 구성과 조총련1계의 위상

은둔의 나라 조선이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세계 각지로의 “Korean Diaspora”도 함께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한국인이 이주를 시작한 곳은 일본과 만주이다. 식민지 시기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일자리를 찾아 간 곳이다. 만주에는 주로 농업이민이 이루어졌던 데 비해, 일본으로는 산업노동자가 주를 이루면서, 서비스업, 유학생, 및 정치 이민까지 다양한 직업분포를 이루면서 이주가 이루어졌다. 해방 후 미국, 남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들로 한국인의 이주가 확대되는 동안, 재일한국인의 구성은 매우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서 ‘재일한국인’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잠시 언급해야 할 것 같다.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북한계 한국인이 주장하는 ‘재일조선인’과 남한계 한국인이 사용하는 ‘재일한국인’이 대립해 왔고, 이에 대해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아인’ 등의 타협적인 명칭이 제안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북한계를 포함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전체를 재일한국인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또한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귀화 한국인이 한국인의 역사적 뿌리와 정체성을 가진 또 다른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귀화한 한국인까지를 포함하여 재일한국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적(state)보다 민족(nation)에 기반하여 재일한국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적(朝鮮籍)에만 한정하여 논의할 때 재일조선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재일한국인집단의 구성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해방 후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재일한국인 사회는 남한계와 북한계로 분단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 중반 귀국지의 전반적 소멸과 일본 사회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분단의 벽이 약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두 개의 사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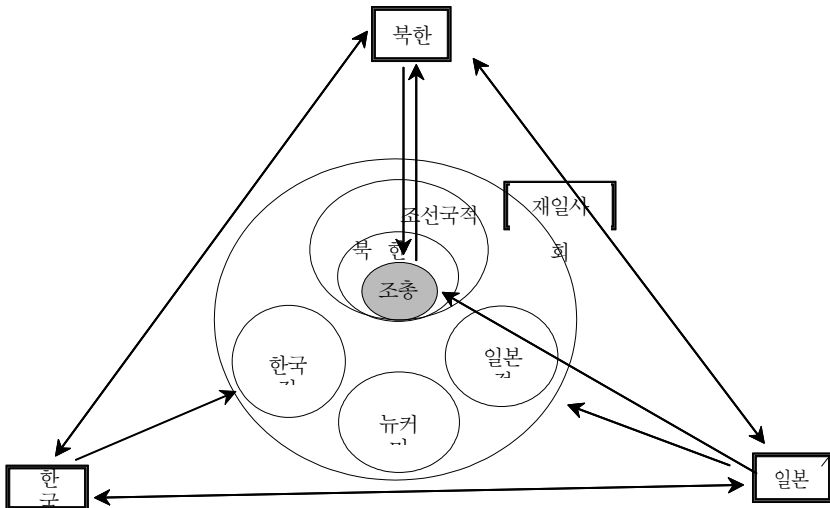
1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약칭.

이루고 있다. 둘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밀항 등의 불법이주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이주가 전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북한, 남한과의 교류가 없는 인구이동의 공백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재일 한국인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1965년 정상화 이후, 특히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1970년대 이후 대규모의 새로운 이주가 시작되었고, 이들은 20년의 단절을 겪으며 형성된 기존의 재일 사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집단으로서 별도의 위치를 잡기 시작했다. 재일 사회에서는 기존의 집단을 올드커머(old comer), 후자의 새로운 집단을 뉴커머(new comer)로 지칭하며, 상호 연결은 지나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넷째, 따라서 재일한국인의 사회는 대부분의 소수민족집단에서는 볼 수 없는 서로 단절적인 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남한계 집단, 북한계 집단 그리고 뉴커머 집단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일한국인 사회는 식민지 시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므로, 재미한국인, 재독한국인 등의 다른 나라의 한국인 사회와는 다르게, 국적문제가 복잡하다. 그것은 귀화에 대한 일본 측의 정책 변화에도 기인하지만, 한국인들 스스로의 민족정체성으로 인한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 재미한국사회에서와 같이 거주기간과 경력이 되면 자연스럽게 귀화하는 것과는 달리, 재일한국인사회에서 귀화는 매우 심각한 심리적 번민을 거치는 결단이며, 따라서 귀화한 집단과 한국국적을 소유한 집단은 서로 또 다른 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재일한국사회는 앞서 언급한 세 집단 외에 귀화한국인이라는 또 하나의 집단이 추가된다. 여기에 더해 '조선'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소속감 없이, 일제시기 이주 당시의 국명인 조선, 즉 분단 이전의 조국을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여, 재일한국인 사회의 구성은 더욱 복잡하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으로 약칭)은 이러한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북한계 한국인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일제시기에 이주한 한국인 중, 해방 후 북한으로 귀향하고자 한 사람들은 귀국이 좌절되어 기회를 기다리며 일본에 남게 되었고, 이후에도 귀국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조총련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조총련은 일본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계 한국인

들에 의해 움직여지지만, 북한계 한국인들의 상황이 광범위한 일본사회의 변화, 북일관계, 남북관계 등의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조총련의 조직 역시 그러한 여러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 왔다. 그에 따라 북한계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조총련이 점하는 비중도 변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도 복잡하게 변해왔다. 예컨대 최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국적 재일한국인이 조총련이 경영하는 민족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많아졌고, 반대로 조총련의 중심이 될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남한 학생들과의 교류도 크게 늘고 있다. ‘조총련계 재일한국인’이란 이러한 여러 사회적 조건 중에 놓여진 특정한 역사적 존재인 것이다.

그림 1. 재일한국인의 구성



이와 같이 독특한 성격의 재일한국인 집단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민족정체성이다. 특히 북한은 일본과 수교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무국적자와 다름없는 지위를 불사하고 있는 북한계 재일한국인이 조선적(籍)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강한 민족정체성이다. 일제시기에 도일(渡日)한 재일조선인은 대부분 고향이 경기도, 강원도 이남 지역이므

로, 이들의 민족정체성은 고향과 무관한 정신적인 것이다. 그중 조총련계 재일한국인의 민족정체성은 북한과의 연결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보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조총련 조직은 재일한국인의 민족정체성에 기반하여 성립된 것이며, 또한 그 활동은 재일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민족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향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 조직의 형성과 쇠퇴의 줄기는 북한에 대한 민족정체성의 변화이다. 북한사회의 변화 및 대일, 대한 관계의 변화 등은 이 민족정체성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조총련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총련의 북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인 민족학교에 최근 남한계 재일한국인 아동이 다수 입학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체성에 고리가 되는 북한과의 연결이 최근 북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악화되는 상황은 민족정체성의 개념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III. 북한계 재일한국인집단의 형성

1. 해방과 잔류

1944년 일본정부의 통계에 나타난 재일한국인의 수는 200만에 가까웠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해방 직후 조국으로 귀환했으므로, 귀환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는 1947년에는 그 숫자가 598,597명으로 줄어들었다.² 해방 직후의 일본정부와 SCAP(미군총사령부)의 한국인 귀국방침에 따라 재일한국인은 대개 귀국했으나, 이때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잔류의 이유가 다른 세 집단으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귀국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감

2 이후 이 숫자는 거의 변함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한으로의 귀국이 다소 더 이루어졌고, 1950년대 말로부터 1970년대에 행해진 북한으로의 귀국과 일본 국적 취득이 있었던 반면, 재일입국 및 자연인구증가 등이 재일한국인 숫자의 가감 규모를 비슷한 정도로 만들었던 것이다. 최근 일본 내 여러 다른 외국인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방 직후 외국인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점했던 한국인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4: 676,793(50.0%), 1995: 666,376(48.9%), 1998: 638,828(42.2%), 2000: 635,269(37.7%), 2003: 613,791(32.1%), 2004: 607,419(30.8%) www.moj.go.jp.

당할 수 없었던 층으로, 특히 이동성이 힘든 최하층 빈민가족이었다고 보여진다. 그 반대의 층은 귀국 시 휴대 가능한 화폐와 짐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시기의 귀국을 잠시 보류했던 다소 여유가 있던 층이다.³ 한국의 심각한 경제난은 이들의 귀국을 더욱 지체시켰던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으로의 귀환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던 상황에서 북한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잔류했던 것이다. 1946년 3월 18일에 미군총사령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귀국희망 신고자 중 1.5%인 9,700명이 북한으로의 귀국을 희망했으며(전준, 1972: 366), 그 수치는 1953년의 재일한국인 출신지별 통계에서 북한 지역 출신이 점한 1.5%와 일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진희관, 1998: 31-32). 기본적으로 이들은 북한 출신의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⁴

한국인의 일본으로의 이주가 본격화된 것이 1917년 무렵이며 193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강제동원으로 재일한국인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므로,⁵ 일단 한국인의 일본체재 기간이 대체로 길지 않은데다, 다소 여유가 있는 층까지 포함하여 당시 재일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생활은 매우 비참했던 것⁶을 감안한다면, 해방 당시 어떠한 이유에서건 일본에 잔류하게 된 한국인들이 일본에 장기 거주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국 지향 의식은 1970년대 들어 재일한국인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할 때까지(정진성, 2001: 208-211), 재일한국인들의 사회운동 속에 매우 뚜렷이 드러나고 있었다.

3 미군사령부는 귀국시 1천 엔 이하의 통화와 250파운드 이내의 화물만을 가지고 귀국할 수 있게 했다(SCAP, 1946: 236).

4 1946년 12월 19일 美蘇 간의 “소련지구 인양에 관한 미소협정에 의하여 북한에 잔류중인 일본인의 송환과 연계하여” 북한으로의 귀국이 추진되었으나 전반적인 악조건 속에서 351명만이 북한으로 귀국했다(정인섭, 1996: 29).

5 일차대전 특수로 노동력 부족을 겪기 시작한 일본으로 농촌이 파괴된 식민지 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1916년 5,624명에서 1917년 14,502명, 1918년 22,411명, 1924년 118,152명, 이후 계속 이러한 속도의 증가가 계속되다가, 1939년 이후 다시 더욱 급속히 증대되었다. 1939년 961,591명, 1941년 1,469,230명, 1944년 1,936,873명(日本 内務省 警報局(1929-1944)).

6 정진성(1987) 참조.

2. 조선적(朝鮮籍) 재일한국인의 형성

1947년 재일한국인의 100%, 1950년에 92.6%를(진희관, 1998: 31-32) 기록한 해방 직후 조선적 한국인의 형성은 지역적, 문화적으로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단 해방 후 연합국 사령부와 일본정부가 재일한국인의 국적을 ‘조선’으로 기재하도록 한데서 시작되었다.

1945년 일본을 통치하게 된 연합국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 SCAP)는 치안유지를 위해서 재일교포를 비롯한 재일외국인을 가능한 한 빨리 귀국시키시키고자 했다. 특히 노동을 위해 강제연행된 재일한국인이 해방 직후 체불임금, 퇴직금이나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그동안의 차별적 대우에 분노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본국 송환은 SCAP의 기본 방침이었다.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일한국인의 귀국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본인의 잔류 의사에 더해서, 일본정부의 귀국대책이 미진했던 점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의 항구에서 몇 달씩 배를 기다리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와 잔류하게 되었으며, 귀국을 돕던 수송선이 침몰하여 사상자와 행방불명이 다발하는 상황에서⁷ 일단 이 혼란한 시기의 귀국은 보류하려는 사람이 늘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ACP은 치안유지를 위해 재일교포를 일단 일본국적자로 인정하고 일본의 형사관할권에 복종하도록 했다. 이들은 1946년 3월 18일까지 일본정부에 등록하도록 되었으며, “... 독립된 한국정부가 해당 개인을 한국국민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일단 일본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들은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출국 후 재입국은 인정되지 않았다(SCAP, 1946; 정인섭, 1996: 23, 36).

이러한 모순적인 일본국적은 1947년 5월에 공포된 외국인등록령으로 끝이 났다. 이 법은 외국인의 일본 출입과 거주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연합국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일본정부가 천황칙령으로 공포한 것으로, “... 조선인

7 北海道, 靑森 등지에서 강제연행 노동자와 그 가족을 태우고 1945년 8월 21일에 출발한 해군선 浮島丸가 침몰한 사건이 그 한 예다(朴慶植, 1989: 46).

은 ... 외국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등록위반자 강제퇴거까지 포함했다(정인섭, 1996: 34-45). 이에 따라 재일한국인은 모두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했는데, 이때 국적란에 모두 ‘조선’으로 기재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지만 ...”이라고 말하여 국적은 애매한 채로 남겨져 있었고, 당시 아직 한반도는 정식 국가가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조선’은 한반도를 가리키는 용어였다.⁸ 조선이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은, 1950년에 대한민국 거류민단(居留民團, 이하 민단)이 일본정부에게 국적란의 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수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일본외무성이 “조선이란 全Korea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안 된다”고 답변한데서도 나타난다.⁹ 아무튼 처음 이러한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비국민화정책에 반발했던 재일한국인 단체들은 피식민적 존재로부터 해방 국민임을 자각하며 이 법령에 동의하게 되었다(최영호, 1995: 276-284).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겪으며 조선적 재일한국인이 형성되었으므로, 이들이 본국에 대한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나라가 곧 분단된 조국의 북쪽에 새롭게 세워진 북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3. 정치적 활동의 결과로서의 북한계 재일한국인 집단

일제시기에 민족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다수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집단은 일단 이러한 사회주의 지향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대립해 있고, 일본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과만 수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계 재일한국인이 유지되어 온 것은 재일조선인연맹(朝連)에서 조총련으로 이어진 정치적 조직의 활동과 이에 대한 북한 정부의 지원과 직결된다.

8 외국인등록령 시행규칙(1947년 5월 2일) 별기 등록신청서 주의사항 제3호(정인섭, 1996: 134; 김석범, 1999a: 319).

9 1950년 1월 6일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외국인등록 증명서 교체에 관한 건의서.” 1950년 1월 23일의 일본 외무성 답변(정인섭, 1996: 134-135).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민단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1950년 2월부터 한국으로 국적을 기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국적란을 수정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후 일본이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애매한 채로 남겨두었던 재일한국인의 일본국적은 완전히 소멸되는 대신, 외국인으로서 당분간 일본에 살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때 일본은 한국만을 합법적 국가로 인정했으며,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는 이러한 입장을 더욱 공식화하여, 한국적 재일한국인에 한해 협정영주권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한국적으로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북한의 식량난 이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선적 재일한국인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아서, 1994년 재일한국인 중 54%만이 한국적 등록을 하고 있었다.¹⁰ 해방 직후 민족학교를 세우고 유지했으며, 1950년대 시작된 재일교포 북송(北送)에 매년 수만 명이 지원한 것에서 나타난 강한 민족적 정체성과 응집력은,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조총련의 정치적 활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IV. 조총련 조직의 형성

이렇게 조선적이 거의 전부를 접한 해방직후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재일한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처음 이루어진 것이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이었다. 조련으로부터 조총련으로 이른 과정은, 범민족 단체로부터 사회주의 지향 단체로 걸러지는 과정과 사회주의 지향 단체에서 일본공산당 영향을 탈피하여 친북한계 민족단체로 변화한 두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조련이 친북한계 조직으로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친한국계 조직으로

10 일본법무성은 한국·조선인 전체의 숫자만을 집계하고 각 집단의 숫자는 공식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발행하는 통일일보에 의하면 1994년 전체 한국·조선인 중에서 한국적이 54%, 조총련 계열이 36.0%선이며, 나머지는 조선을 통일된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통일일보, 1994; 정인섭, 1996: 142). 그 밖의 국적문제에 관해서는 정인섭, 1996: 제3장 참조.

1946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이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에서 다시 재일본 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 이하 민단으로 약칭)이 설립되었다. 조련은 세계정세와 일본사회의 변화 및 남북한 정부의 재일한국인 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해산되었다가, 조국방위대 및 민전의 두 조직의 시기를 거쳐, 1955년 북한 노동당의 강력한 지도를 받는 조총련을 탄생시켰다.

1. 조련(朝連): 범민족단체에서 사회주의 단체로

해방 직후 재일한국인 사회에는 재류조선인대책위원회, 재일본조선인민겨류동맹 등 300여 개의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이러한 단체를 규합하여 전국적인 통일단체를 만들기 위해 1945년 9월 재일조선인연맹 중앙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를 모체로 1945년 10월 조련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¹¹ 처음 조련은 정치적 색채를 띄지 않고 전국적 대중조직으로서, 귀환절차 돕기, 생활상담 등 재일조선인의 생활을 돕는 활동을 주로 했으나, 金天海 등 일본공산당 간부들의 대거 참가와 더불어, 점차 공산주의의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게 되었다. 더욱이 과격한 무력 행동을 벌이기도 하여, 민단, 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建靑) 등 이에 반발하는 이탈세력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격 행동이 이유가 되어, 1949년 9월 일본 법무부는 조련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후 당분간 좌파 조선인들의 활동은 일본공산당의 직접지도 하에 이루어졌다. 일본공산당은 당내에 조선인부를 만들어 조선인 좌파활동을 지도했으며, 1949년 12월 그것을 지하조직인 민족대책부로 개편했다(진희관, 1998: 33-38).

11 조련의 결성에 반대하여 우파적 민족주의자들은 1945년 11월 16일 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建靑)을 발족했고, 다른 한편, 조련과 건청의 대립을 목도하면서 무정부주의 계 및 민족주의적 중립파들이 1946년 1월 20일에 新조선건설동맹(建同)을 결성했다. 건청과 건동을 비롯한 군소 32단체들은 반공 우익진영의 결집체로서 1946년 10월 3일 재일본조선거류민단(1948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1994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을 결성했다.

2. 조국방위대의 패배와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民戰) 결성: 일본공산당으로부터의 독립

조련 해산 후, 북한계 재일한국인은 새로운 민족단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방향을 모색했다. 그 노력은 일본공산당과의 관계에서 구별되는 크게 두 개의 결실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일본공산당의 직접 지도로 이루어진 조국방위대(조국방위위원회에서 개칭)와 일본공산당과는 다소 거리를 두면서 북한에 대한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천명한 민전이 그것이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6월 28일 일본공산당 민족대책부는 조국방위위원회를 조직했고, 9월 이것을 조국방위대로 개편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완성했다. 이 조직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미국을 적대시하여 북한과 긴밀히 연계할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이 모든 것은 일본공산당의 지도로 이루어졌다. 조국방위대는 1955년 5월 조총련이 결성된 후, 7월 해산되었다.

다른 한편, 일단의 재일한국인들은 조련 해산 직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수한다”는 친북적 입장을 재일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1951년 1월 재일조선총일민주전선을 결성했다. 따라서 조련을 계승하고 이후 조총련으로 이어지는 맥을 이은 단체는 민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체는 산하에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민주소년단, 조선장학회, 통일민보사 등의 많은 부속 단체를 두고, 강제추방, 강제격리, 조선인 학교 문제 등, 재일한국인들의 여러 문제를 위해 활동했다. 이렇게 북한과의 직접적인 동일시를 표명한 민전에 대하여 일본공산당은 간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것은 민전으로 하여금 보다 명확히 일본공산당이나, 북한이나의 노선 선택을 강요하게 했고, 결론은 북한 지지였다. 이것은 또한 보다 명확히 남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되었다. 민전은 일본공산당으로부터의 독립을 보다 확실히 하는 재일조선인의 단체를 세우기 위해 민전이라는 단체를 해산할 것을 선언하고, 재일조선인총연합회를 조직하게 되었다(진희관, 1998: 38-49).

3. 조총련의 결성

북한계 재일한국인 일본노동당의 지도로부터 독립하고 북한노동당의 지도로 노선을 전환하면서, 1955년 5월 한덕수라는 북한과 밀접한 연락을 가지고 있던 강력한 인물을 중심으로 조총련을 결성했다. 이후 조총련은 재일한국인 절대 다수를 포괄하면서 발전하다가 북한의 약화와 더불어 쇠락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계 재일한국인의 단체로 자리잡고 있다.

조총련의 결성은 이와 같이 재일조선인사회 내부로부터 일어난 민족정체성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핵심적 기제가 되었다. 이러한 민족정체성과 조총련 조직은 한편으로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탄압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정부의 재일교포 포용정책으로 인해 강화되었으며, 한국전쟁 및 이후 남북관계의 경직화 등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더욱 촉진되었다. 그러나 뒤에 언급할 바와 같이 바로 이러한 여러 사회적 배경의 변화, 즉 재일사회 내부의 변화, 일본사회의 재일정책, 북한 사회의 변화 및 북일관계와 남북 관계의 변화 등은, 이후 조총련의 쇠락에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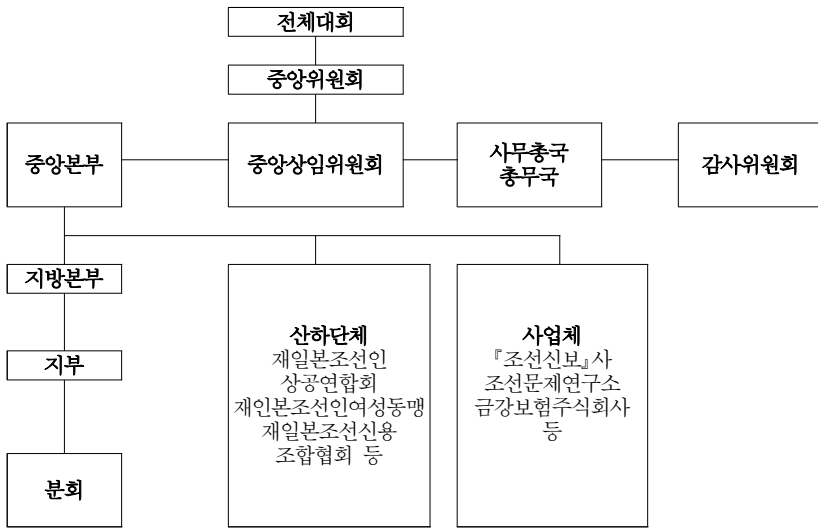
4. 조총련 조직의 구조

1991년 조총련이 발행한 책자에 의하면, 조총련 조직은 그림 2로 요약된다.

여기서 볼 수 있는대로 분회(分會)는 조총련의 말단조직으로서 조총련계 가정을 묶어서 공동체적 생활을 유지시키고 민족적 정체성을 높이면서 조총련 조직 전체로 연결하는 핵심 단위이다. 조총련은 이 분회를 중심으로 조국 방문사업, 생활지원사업 등의 주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분회 간에 경쟁을 도모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총련 조직의 약화가 현저하게 진전되기 시작했을 때, 조총련이 가장 힘을 기울인 부분의 하나가 분회강화운

동이었다. 분회는 일본 전국에 1,300여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크기는 일률적이지 않다. 1,300여 개의 분회는 바로 위의 상부조직인 280여 개의 지부로 묶이며, 지부는 다시 각 都道府縣을 단위로 하는 48개의 지방본부(도쿄는 두 개)로, 그리고 도쿄의 중앙본부로 모아진다. 이러한 위계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조총련은 북한정치체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했으며, 활동도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등, 재일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이문웅, 2003).

그림 2. 조총련 조직



자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1991: 29.

이러한 기본조직 외에 조총련은 여러 산하단체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산하단체들은 대부분 일본 전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는 북한계 재일한국인 기업인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도 생산하고 있다.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은 북한계여성들을 묶는 조직으로서, 일본 각지에 부녀회 모임을 관장하고 있다. 특히 1~2세 여성들에 의해 유지되는 부녀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꺼져가는 민족정체성을 붙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¹²

V. 조총련의 활동: 민족적 정체성의 강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 고향이 남한인 북한계 재일조선인들의 북한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것은 조총련의 정치적 활동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조총련의 활동을 보면 무엇보다도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민족학교운동이다. 민족학교를 통한 모국어의 습득과정은 해방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갖은 어려움을 겪으며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시킨 가장 중요한 기제였으므로, ‘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다각적인 연결은 이들의 북한정체성의 또 다른 축이다. 이러한 조총련의 활동이 북한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지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² 이밖에 차별철폐운동과 다양한 생활지원은 이들의 조총련 조직과의 끈을 강화시킨 것이었다.

1. 민족학교운동

남한계 재일한국인이 대체로 일본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데 비해, 최근 민족학교의 쇠락 이전까지 대부분의 북한계 재일조선인은 조총련이 주력한 민족교육을 받았다.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조총련의 민족학교는 북한계 재일조선인사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서, 민족학교는 언어와 더불어 민족정체성을 유지시키고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의식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해방 후 이미 조련이 설립한 국어강습소를 시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민족교육을 위해 북한정부가 시행한 지원과 영향력은 무

12 필자가 2003년 동경 근교 부녀회를 방문했을 때, 1, 2세 중심의 중·노년 여성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문제에 관하여 일제시기 수백만의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일본이 지나치게 북한을 공격하는데 대해 심한 반감을 드러냈다.

13 북한정부의 동포정책에 관해서는 윤인진(2005), 손기만(2001), 안성환(1995) 등을 참조.

시할 수 없으므로, 일본에서 태어난 2세 이상의 재일조선인들도 자신들이 모국어를 익히고 민족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북한정부 덕택이라고 생각한다.¹⁴ 실제로 해방 후 북한정부의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은 남한정부에 비해 상당정도로 높았다.¹⁵

일제시기 동안 모국어를 잃고 살았던 재일한국인은 해방 직후 일본 각 지에 국어강습소, 한글학교 등을 세우기 시작했다. 1946년에 이르러 재일한국인이 상당정도 일본에 재류할 전망을 감지한 조련은 본격적인 정규 학교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초등학교 건립을 결정했다. 한국으로의 귀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1946년 10월 시점에서 조련이 운영하는 민족학교는 초등학교 525개교(아동수 42,182명, 교원수 1,022명), 중학교 4개교(생도수 1,180명, 교원수 52명), 청년학원 12개교(생도수 750명, 교원수 54명)이었다. 재일한국인의 교육열과 조련의 활동에 따라 그 수는 1년 사이에 크게 늘어나서, 1947년 10월 각각 541개교, 7개교, 30개교가 되었다(朴慶植, 1989: 138-143).

민족교육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매우 강경한 억압 정책을 시행했다. 1947년 3월에 발표된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에 따라 민족학교도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1948년 1월 24일에 문부성은 “조선인 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통첩(通牒)을 지방행정기관에 송부하여 민족학교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재일한국인도 일본의 정규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련은 조선인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 등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맹렬한 항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한국인이 집중해 있던 오사카, 코베 지역에서 일본정부의 탄압과 이에 맞선 재일한국인들의 교육투쟁은 매우 격렬하여 다수의 운동 가담자들이 체포되어 중형을 받았고, 이에 대한 부당탄압반대 시위로 이어진 ‘阪神교육투쟁’이 일어났

14 필자가 2003년 10월 20일에 면담한 조선대학교의 한 학생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민족교육 때문이고, 그것은 북한 정부의 보살핌 덕분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조국에 대한 애정이 솟구친다.”고 말했다. 자신이 민족학교 출신인 재일조선인 Sonia Ryang은 1997년에 미국에서 출판한 조총련계 조선인의 정체성에 관한 저술, *North Koreans in Japan*(1997)에서 가장 많은 분량과 가장 중요한 부분의 논의를 민족학교에 할애하고, 그에 관한 논의에서 책을 시작하고 있다.

15 1957년 남한 22,000\$ 북한 615,580\$; 1971년 각기 577,236\$ 3,321,020\$(이정훈·윤인진, 1998: 4).

다. 이 투쟁은 동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도 파급되었으나, 5월 타결되었다. 문부성은 “조선인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6일)를 都道府縣 지사에 통달했으며 별지 각서에 조선인들도 조인(調印)했다(5일). 일본정부는 사립 학교로서 자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민족학교를 허락한다는 것과, 조선인들은 일본의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을 따른다는 내용이였다(朴慶植, 1989: 183-208).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재일한국인의 모국어 능력과 민족정체성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민족학교의 존재는 해방 직후의 이러한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재일한국인의 일본 정주(定住) 지향이 늘어나면서 일본학교 진학의 경향이 강해졌으므로 민족학교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정부 및 사회의 다각적인 차별 때문이기도 하다. 민족학교는 정규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졸업생들은 대부분의 일본대학에 시험을 칠 수 없었다. 상황이 나아진 1994년에도 454개의 대학 중 179개 대학만이 민족학교 졸업생의 입학시험 치를 자격을 허용했다. 95개의 모든 국립대학은 굳게 문을 닫고 있었다(Okayama Korean School, 1999: 6). 이러한 차별은 최근 중국인들도 합세한 반대운동의 효과로 점차 완화되어서, 2004년에는 마침내 동경대학도 민족학교 졸업생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은 일본에 정주하려는 재일한국인의 발길을 돌리게 한 요인이 되어온 것이다. 이밖에도 고등학생 전국체전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나, 치마저고리를 교복으로 입는 민족학교 여학생에 대한 폭력 등, 민족학교에 대한 차별문제는 심각하다.

따라서 민족학교는 조총련의 민족 ‘운동’으로서 인식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민족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길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현재 조총련은 일본 전역에 45개의 유치원, 62개의 초등학교, 38개의 중급학교, 11개의 고등학교 및 조선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¹⁶

16 1999년에는 67개의 유치원, 83개의 초등학교, 56개의 중급학교, 12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다(배정호, 1999: 23). 이러한 민족학교의 감소는 조총련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과의 연결

1959년 12월 제1차 재일교포 복송이 실시된 이래 1959년 복송 첫해를 넘긴 후 다음 해인 1960년에 49,036명, 1961년에 22,801명이 북한으로 귀국하여, 1967년 11월 북송협정이 폐기될 때까지 총 88,611명의 교포가 155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보내졌다. 1971년 2월 북송재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다시 교포의 복송이 재개되었으며, 1996년 현재 북송교포 수는 93,33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포들이 북송하면서 조총련에 기부한 재산으로 조총련의 재정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북송교포를 매개로 북한과의 교류도 촉진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잡음도 심각하여 교포 복송은 조총련의 주요 업적임과 동시에 부정적 역할로 평가되고 있다(배정호, 1999: 26-29).

이후에도 조총련계 재일한국인의 북한 방문은 조총련의 주요 활동이었다. 북한방문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2003년에 필자가 방문한 가나가와현의 조총련계 민족학교에는 각 교실마다 북한 방문 감상문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는데, 이것은 북한방문이 확실히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조국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조총련의 기저조직인 분회(分會)에서 최근 “동포들을 찾아가자! 만나자! 이야기하자!”는 구호 아래 동포방문사업을 강력히 벌리고 있다는 점도(『조선신보』 2002/3/20; 이문웅, 2003: 12에서 재인용) 약화되어가는 민족적 정체성을 되살리는데 북한과의 연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생활지원 · 차별개선운동

재일한국인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민단과 조총련 및 그러한 단체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많은 재일한국인들의 공동 활동이었다. 조총련은 특히,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가 수립되지 않은 일본에서 무국적자로 취급되고

있는 북한계 재일한국인들의 법적 지위를 위한 투쟁을 주요 활동목표로 삼아 왔다.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특히 북한계 교포들의 참정권, 교육문제 등은 한층 어려움을 크게 하고 있다.

재일한국인들의 생활을 위해 해방 후 처음부터 주력한 사업 중 하나가 금융사업이다. 1952년 민단과 조련이 공동으로 동화신용조합을 세웠다가, 1961년 조총련계 기관으로 변화되면서 朝銀동경신용조합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기관은 일본 전국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송금을 관장하면서 교육사업 및 일본은행의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도 이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발행은 조총련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1945년 10월 민중신문으로 창간된 북한계 재일교포의 신문은 이후 『해방신문』, 『조선민보』로 개칭되면서 폐간과 복간을 되풀이하다가, 1961년 『조선신보』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밖에 조총련은 『조선주보』, 『조선시보』, *People's Korea*, *Populaire Coree*, *Corea Popular*, 『조국』, 『조선자료』(조선문제연구에서 개칭)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기간행물 외에도 조총련 조직에 관한 국문 및 영문판을 간행하고, 『김일성전』, 『김일성저작선집』 등의 단행본을 출판했다. 이를 위해 九月書房, 학우서방 등의 출판사를 운영하고, 조선문제연구소도 설립했다(진희관, 1998: 85-86).

VI. 조총련의 약화와 그 사회적 배경

조총련 조직은 해방 후 활성화의 시기를 거친 후,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것은 북한의 국력 쇠퇴 및 북일관계 변화에 따른 일본사회에서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조총련의 쇠락과 직접 연결시킨 조건은 북한에 대한 민족정체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재일교포 3.4세들의 민족의식 이탈과 북한계 재일한국인을 특징지었던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어 입학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

교들이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되고 학급수도 대폭 줄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길게는 수 시간으로 늘어났다.¹⁷ 그와 더불어 조총련 기관지 및 김일성 관련 출판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출판문화사업도 침체되었다. 조총련은 교육과 출판의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일본경제의 악화와 더불어 금융사업도 파산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것은 조총련의 경제적 구심력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재일한국사회 내부의 변화

해방 후 재일한국인의 의식변화는 전반적인 민족의식의 약화, 무관심화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새로운 민족문화운동의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양면적 경향은 모두 1세 - 2세 - 3세를 통하여 진전되어온 귀국지향으로 부터 정주(定住)의식에로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해방 직후 대부분 귀국을 '보류'한다는 귀국지향의 사고가, 세대를 지남에 따라 약화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1971년 한국에서 행한 재일한국학생하계학교입교에 대한 조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1)에서 이미 일본에 영주의사를 밝힌 사람이 82.8%였으며, 1985년의 神奈川 조사 결과, 일본 영주 의사가 젊은 세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강해지고 있다(金原左門, 1986). 본인이 면접조사를 한 조직운동의 리더들은 젊은 세대에서 고국에 대한 무관심이 점차 지배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정진성, 1990), 福岡(1994) 등의 조사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조총련의 구심점을 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래 민단-조총련과 관련없이 시작된 시민운동의 형태로써 정치 권리운동 뿐 아니라, 문화 교육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일본각지에 한국

17 이문웅(2003)은 최근의 민족학교의 상황에 관해서 매우 정밀한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의 무용 역사 노래를 배우고자 하는 소모임과 어린이회, 연구회 등이 생성 소멸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재일한국인 전체에서 작은 부분을 점하는데 불과하지만 민족적 전통을 찾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의식의 모습임에 틀림없다(강영우, 1987: 7; 太田順一, 1987: 131). 이러한 문화운동 역시 대부분 정주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본국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추상화, 상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일 한국인 사이에 남북의 대립, 차별의식이 희석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통혼(通婚)과 함께 남북간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통혼으로 인해 재일한국인 집단자체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조총련의 총체적 약화의 한 요인이다. 특히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新)국적법으로, 이전까지의 부계(父系)주의로 부터 부모양계(父母兩系)주의로 전환하여 부모(父母)주의로 전환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본인이라도 자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일한국인 규모 축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 북한의 경제난 및 조총련-북한의 교류 약화

해방 후 재일교포의 민족교육 등에 대대적인 지원을 했던 북한의 경제적 몰락은 조총련 조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북송교포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알려지면서 교류의 어려움을 더했다. 1980년대에 들어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북한은 조총련계 기업들에게 합영사업¹⁸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조(朝朝) 합영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1986년에는 이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북한과 조총련을 연결하는 조선국제합영총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팽창하던 대북한 투자는 1992년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냉각되어 조업 중단 사태 및 도산사태가 빈번해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는 현저히 약화되었던 것이다(배정호, 1999: 38-47).

18 북한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으로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했다.

3. 북일관계 및 일본사회의 북한 인식 악화

일본사회의 북한 및 북한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조총련의 흥망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일본 내 대북여론의 악화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진전되어온 일본의 국제화 및 재일한국인에 대한 개방적 경향과 맞물리면서, 조총련계 한국인의 민단계로의 전향을 촉진시켰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민족학교 여학생에 대한 폭행이 자주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이다.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문제, 핵문제로 인해 일본사회의 북한 이미지는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일본은 전후처리 외교차원에서,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1991년부터 시작된 북일 국교정상화의 시도는(배정호, 1999: 35-37), 1997년에 접어들어 북한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 사건, 각성제 밀수 사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 배치 의혹 사건 등으로 인해 북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 발사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고, 우익단체들은 북한과 조총련에 대해 비방과 항의활동을 전개했다.

4. 한국의 변화와 한국적으로의 국적이동 증가

조총련 사회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한국의 변화이다. 1988년의 올림픽이 계기가 되어 일본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이러한 인식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70년대 이후 진전된 변화로서, 남북계 재일한국인 집단의 정치적 성격이 악화되고 공동의 시민활동이 증가한 것도 북한계 재일한국인이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게 된 요인이 된다. 더욱이 한일간의 교류가 진전되면서 재일한국인의 한국방문이 늘어났고, 북

한방문에 비해 용이해진 한국방문은 조총련 사회를 크게 동요시켰다. 북한계 재일 한국인들 사이에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의 경향과 더불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 북한계 재일 한국인이 남한을 방문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민단이 남한 국적 취득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키고 있기도 하다.¹⁹

조선적 재일한국인 집단에서 한국적으로의 이동경향은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주로 앞서 언급한 해방 직후 ‘조선’이 의미한 통일 조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를 둘러싼 것으로써, 북한이 일본과 수교할 경우, 남북한이 모두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할 경우, 무국적자를 불사할 만큼, 통일에 강한 집념을 가진 ‘무국적’으로서의 조선국적 재일한국인의 목소리다.²⁰

VII. 변화의 새로운 시도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조총련 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눈에 띄기도 한다. 민족학교가 일본학교 체계에 맞도록 커리큘럼을 바꾸고 조총련계 학생들 뿐 아니라 한국국적의 학생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다. 조총련 조직에 민주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여성 참여가 신장되고 있다. 조총련계에서 북한지향의 단일했던 민족적 정체성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것은 폐쇄된 조국, 북한사회에 대한 자기성찰이기도 하고, 일본에서 조총련계 재일한국인으로 살아갈 열려진 생존방식의 탐구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9 2003년 11월에 필자가 만난 도쿄 내 총련 조직의 한 여성은 조선적 재일한국인은 민단을 통해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방문을 허가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한국적으로의 변경을 요구한다고 불만을 말했다.

20 이에 관해서는 서경식(1996; 1998)과 김석범(1999a; 1999b)를 참조할 것.

1. 민족학교의 변화

조총련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족학교에서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다. 민단계 민족학교가 일찍이 일본 정규 학교에 요구되고 있는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조정하는데 비해, 북한식 교육내용을 상당부분 교수하고 있던 총련계 민족학교들에서 커리큘럼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1973년과 1983년의 교과과정 개편에서 김일성 숭배의 사상교육 내용이 강화되었던 것에 비해, 1993~1995년에 이루어진 개편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에 관한 내용이 대폭 축소되고 일본의 역사, 사회, 언어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Ryang, 1997: 51-67; 이문용, 2003) 그와 더불어 일반 학급 교실마다 붙어있던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사라졌다. 필자가 2003년에 방문한 가나가와 조선학교와 오사카 조선학교(초중고급부)에서는 2년 전부터 교실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떼어냈다고 한다. 교장실에만 사진이 남아 있다.

그와 함께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총련계 민족학교에 민단계 학생들이 대거 입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위의 오사카 조선학교는 거의 반을 민단계와 뉴커머 학생들이 점했으며, 가나가와 학교에도 민단계 학생이 다수 있었다. 이것은 물론 재일한국인이 집주하는 대도시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현상이지만, 총련계 한국인에게 배타적으로 이용되었던 민족학교가 재일한국인 전체 및 남한 사람들에게까지 사용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3년 10월 가나가와 조선학교는 재일한국인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발표자는 총련계 재일한국인, 민단계 한국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이 모임을 위해 온 발표자는 해방 이후 지속된 민족교육의 정당성을 ‘생명선’과 같다며 높이 평가했다. 한국정부에 “일본의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과 민족교육을 내실화시키는” 정책을 제언하는 학자도 있다(윤인진, 2000). 민족학교가 일본 내의 북한과 같이 평가되었던 것으로부터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장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학의 경우 초중고 민족학교에 비해 아직까지 북한체제와 김일성, 김정일 숭배 분위기가 강하나, 한국인이나 민단계 재일한국인에 대해 문이 닫혀 있던데 과거에 비해 최근 상당히 개방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학과 교류를 가지기도 하며 한국으로부터 온 교수들에게 특강을 부탁하기도 한다.

2. 정체성의 변화

매우 강한 조국지향을 나타냈던 총련계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이 앞서 논의한 여러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다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²¹ 전반적으로 총련계 재일한국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총련계 재일한국인의 민족정체성은 다른 어떠한 소수민족보다도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민족학교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총련 조직이 완강하게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필자가 1990년대 초부터 수년에 걸쳐 면담한 오사카 지역 총련 소속의 한 조선대를 졸업한 사람은 최근 진전되고 있는 조선적으로부터 한국적으로 국적을 바꾸는 경향에 대하여 하나의 조국이므로 괜찮다고 말하는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그러나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조선적 재일한국인의 존재가 남아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동경 근교의 중·노년층 여성들과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 총련계 재일한국인의 한 그룹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조선대 졸업생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2002년 동경에서 열린 조선적과 한국적 재일한국인, 뉴커머, 일본적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재일’의 모임에서 만난 한 조선적 재일한국인은 통일이 되면 조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언어와 국가를 알아야만 세계 속에서의 자신을 알 수 있다고

21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통계조사나 다수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총련계만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대체로 담론분석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면접에 기초한 연구가 다소 있을 뿐이다. 이 부분은 주로 필자가 2003년에 일본에서 수행한 면접조사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를 위해 보다 많은 수의 면접조사가 필요하다.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조총련 조직이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을 키우고 유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데 이의가 없으며 감사와 충성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국지향을 가지면서도 일본사회와 한국, 민간계 재일한국인들에 대하여 점차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대로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총련계 재일한국인들이 조국 귀환의 의지를 접고 일본에의 정주를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으며, 총련계와 민간계의 재일한국인들이 함께 기획, 참여하는 문화 및 권익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필자가 만난 조선대학생들은 모두 한국 드라마, 소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방문, 한국학생들과의 교류도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학생과 이메일을 주고 받기도 한다. 서울에 친구가 많으며 필자에게 친근감을 나타낸 한 조선대 남학생은 호카이도에서 열린 한국-일본 대학생 합동 유골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일 간 교류에 자원활동으로 통역을 한 학생도 상당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지나친 폐쇄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한 조선대 여학생은 총련계 재일한국인의 한국과의 교류가 증대되는 것을 보면서, 나만 단절되는 아닌가하는 초조감이 인다고 말했다. 총련계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조선대 졸업생은 일본에서 민족학교만을 다녔기 때문에 일본사회에 대해 너무 모르고 일본인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어 단절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에 유학하여 이제는 한국유학생 친구가 많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총련 조직에 속하여 총련계 사람들과의 교류만을 주로 해온 부녀회 사람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아는가, 자신들이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아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총련계 재일한국인의 개방성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VIII. 결론

조총련 조직은 재일한국인 내부의 역학과 북한사회의 변화, 그리고 남북한 관계, 북일, 한일관계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그 한가운데에서 민족학교가 변화의 중요한 부분을 표출하고 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닫혀있던 학교의 문이 민단체 학생들에게 크게 열렸으며, 한국과의 교류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총련 중앙본부는 북한 본국과 강한 연결을 가지고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듯하나, 지부 차원에서 민단 및 민단체 재일한국인과의 개방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총련계 재일한국인의 규모 감소와 정체성 변화가 또한 표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조총련 조직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조총련 조직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남아 있을 것인가, 조선적 재일한국인이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재일한국인 자체가 얼마나 존속할 것인가에 우선적으로 의존할 것이며,²² 또한 북한의 상황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꾸로,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의 산물인 조총련 조직과 북한계 재일한국인이, 남북한 관계에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도 주목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이것은 차후 중요한 과제로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2 재일한국인은 더 이상 한국적, 조선적을 갖지 않고 귀화하여 후 한국계 일본인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자연소멸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坂中英徳, 1999). 그러나 최근 들어 매년 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특별영주자가 글자 그대로 자연소멸하기 위해서는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반영주자와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이주의 증가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면, 그 기간은 더욱 연장될 것이다. 1965년 한일협약 당시, 2세까지만의 영주자격을 논의하고 3세 이후의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정부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25년 이내에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이, 25년 후에는 실질적인 문제 대부분이 자연소멸될 것이라는 일본측의 생각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우. 1987. 「민족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役能의 재정립」. 『교포정책자료』 25. 해외교포문제연구소.
- 김대성. 1996.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석범. 1999(a). 「지금 ‘재일 조선인’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실천문학』 봄호 pp. 318-335.
- 김석범. 1999(b). 「다시 재일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당대비평』 7호 pp. 189-202.
- 김태기. 1999.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정책」. 강덕상, 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배정호. 1999.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조총련의 생성, 발전, 쇠퇴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사회문화 下』. 민족통일연구원.
- 서경식. 1996. 「재일조선인의 위기와 기로에 놓인 민족관」. 『역사비평』 여름호 pp. 63-86.
- 서경식. 1998.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창작과 비평』 겨울호 pp. 353-371.
- 손기만. 2001. 「북한의 해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성환. 1995. 「북한의 대조총련 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삼열. 1992. 「북한의 재일동포정책과 조총련」.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인진. 2000.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일동포의 역할」. 평화문제연구소, 재일동포 초청 통일문제 세미나 발표 논문.
- 윤인진. 2005. 「남북한 재일동포정책의 비교」. 『한국사회』 제6집 1호 pp. 33-71.
- 이문웅. 2003.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인류학적 접근」(미발표논문).
- 이정훈-윤인진. 1998.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발전방안」. 재외한인 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 재일본조선총련합회. 1991. <총련>
- 전 준. 1972. 『조총련연구』 1, 2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장인성. 2003. 「총련계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지역연구』 12권 4호.
- 정인섭. 1996.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진성. 1987. 「계급으로서의 민족공동체: 일제시기의 재일조선인사회를 중심으로」. 『현대 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최흥기 선생님 회갑기념논문집). 한길사.
- 정진성. 1990. 「재일한국·조선인의 가족·결혼상황」. 『교포정책자료』 33집. 해외교포문제연구소.
- 정진성. 2001.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나남.
- 진희관. 1998. 「조총련연구」.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영호. 1995.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 金原左門. 1986. 『日本の中の韓国・朝鮮人, 中國人』. 明石書店.
- 朴慶植. 1989. 『解放後 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 福岡安則. 1994. 『在日韓国・朝鮮人』. 東京: 中央公論社.
- 日本内務省警報局. 1929-1944. 『社會運動の狀況』.
- 日本法務省入國管理局. 2005. 『外國人登録者統計』.
- 中島智子. 1981. 「在日朝鮮人教育における民族學級の位置と成格」. 『京都大學教育學部紀要』第27號.
- 太田順一. 1987. 『女たちの飼野』. 晶文社.
- 坂中英徳. 1999. 『在日韓国・朝鮮人政策論の展開』.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 Okayama Korean School. 1999.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Ethnic Education by Korean People in Japan. (Okayama Korean School 팜플릿)
- Ry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Westview Press.
- SCAP. 1946. Summation 4 (January). (SCAP 문서).

Formation and Changes of Chongryun

Chinsung Chung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gryun (Organization of Koreans in Japan sympathizing with North Korea) was formed after the Liberation, in Japan, by Koreans living in Japan who were loyal to North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formation of Chongryun, and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Chongryun members is maintained. Most of the Chongryun members are second,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Koreans who went to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y and how do they still keep North Korean nationality to this day? Because there is no normalization treaty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their North Korean nationality is not formal, but regarded as just a sign.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ethnic education through Chongryun schools and direct connection to North Korea including visits to North Korea. Most of Chongryun children attend ethnic schools run by Chongryun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s where they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Since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did not give approval to the graduates of Korean ethnic schools to apply to Japanese universities

until very recently, enrollment in the ethnic schools is the result of national identity as well as the factor strengthening it. From the establishment of Chongryun and Chongryun school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d strongly supported the schools, and there had been frequent exchange of people and materials between Chongryun and North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Chongryun schools began to change. They have reformed the curricula, adjusting to the Japanese school system including the removal of the picture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from the classrooms, and a large number of Mindan (Organization of Koreans in Japan sympathizing with South Korea) children are entering Chongryun schools. More contacts of Chongryun people with South Korean society constitutes another important change.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worsening of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internal changes of Koreans in Japan, and others are bringing about changes within Chongryun.

I conclude the paper expressing the expectation of more important role of Chongryun for North Korea in opening itself towards outside world.

Key Words: Chongryun, North Korea, Koreans in Japan, Ethnic School, National Identity